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선택

대담 : 조 민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 2009. 7. 30 10:30~12:00

장소 : 소회의실

정리 : 박용규 (북한연구센터 인턴연구위원)

지난 7월 27~28일 워싱턴에서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진행되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관심사가 논의되었다. 그리고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간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테러리즘 대처,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 등 국제적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의 이행과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G2시대의 개막과 한반도

조 민: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제대화로 G2시대가 개막됐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미·중 간 동반자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실질적인 G2시대 개막의 세계사적 의미는 큼니다. G2대화로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경제적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 중심 구도로 전환되면서, 19세기 중엽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 시대 이래 서구 중심의 세계사가 21세기 초엽에 와서 미·중 양분 구도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올해 초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올 상반기 동안 한반도 정세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7월 들어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국면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합니다.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과 전략 방향이 거의 운곡이 잡힌 상태이지만, 미·북 간 핵문제 접근 방식에서는 상당히 큰 간극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G2대화를 통해 미·중간 북한 핵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 중심의 대북 제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유엔 결의안 1874호 이행의 필요성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합의한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행보가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 변수임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제 북한이 G2 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측 포인트입니다. G2대화를 계기로 일단 북한에 공이 넘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최진욱: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G2개념이 시작될 때부터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기본적인 대미전략은 미·중 간의 갈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북한은 미국의 관심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다고 보고, 북한 스스로 미국의 역내 이익에 부합하는 데에 전략적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게 미·중 협력은 곤혹스러운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유엔 결의안 1874호 이행 필요성에 합의하고, 이 즈음해서 북·중 국경에서 전략물자 밀반입에 대한 단속이 이

루어진 것은 북한에게는 아픈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겠지만, G2의 출범은 본격적인 미·중 공조체계의 등장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 만: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G2는 경쟁보다는 합의 구도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G2구도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학 구도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이는 북한의 대외전략의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의 대외전략이나 통일정책의 재점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 10년 간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우선 중국의 부상입니다. 미·중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비해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상당히 증대된 측면을 주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빠른 템포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만 남았지요. 그와 반대로 일본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은 점차적으로 축소·약화되는 경향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한국의 입지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상과 역할은, 우리가 오래 동안 스스로 약소국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계로 종종 잊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어요. 이러한 역학관계는 지난 6년 동안 6자회담의 역할 구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약체화와 군부의 무모한 선택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약체화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과 비교해서 북한의 약체화는 한층 심각해졌고, 후계자 구도와 관련한 미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 상황, 주민통치, 리더십 전환과정 등 모든 면에서 북한체제가 10여 년 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핵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 전망 속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욱: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지목하셨는데요. 북한 약체화 원인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실태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일의 건강 악화 이후 급격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북한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즉, 대외정책의 경우 정교하게 계획된 정책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군부가 득세한 이후로는 무모한 행동이 지속되어왔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0여 년 간 선군정치 시기 김정일은 당·군·내각의 주요 부서를 직할 통치해왔으며, 자신에게 도전 가능한 큰 부서들은 작은 부서들로 나눴습니다. 선군정치 시기 김정일의 직할통치가 2인자 없이 작동되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 이후 국방위원회가 확대 강화되면서 내부의 정책 총괄은 장성택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직할통치 시 횡적 교류가 없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국방위원회 내부에서는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국방위원회 내부에는 소통이 되지만 그 외는 상호 소통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데, 이의 대표적인 부서가 통전부와 외교부입니다. 특히, 외교부와 통전부 등 이런 부서들이 배제된 가운데 대외·대남정책을 군부가 장악한 상태에서 과격하고 위협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 만: 북한이 대미·대남정책에서 무리수를 두게 된 배경을 전문화된 정책 부서가 배제되고 국방위원회가 전면에 나서 주도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최진욱: 그렇습니다. 올 초 한반도 상황 악화는 북한 군부가 허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다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접하자 '북한 불패론'을 언급하며 제재국면에서 결국 북한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북한은 동상 걸린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신체의 중심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먼 손발에 혈액 공급을 줄이는 것처럼, 지금 북한은 인민을 버리고 군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을 버리고 중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 상태에서도 평양을 새롭게 단장한다고 돈을 들이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해주는 좋은 예가 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중대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붕괴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조 만: 북한은 외부지원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대내적인 자원가동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곧장 체제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국가와 사회의 분절 상태에서 주민들은 그들대로 살아가는 생존방식을 터득했고, 통치계층은 또한 그들대로 위기의식 속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존재야말로 북한 붕괴를 막는 결정적인 요인 아니겠어요... 중국은 빈사상태의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명맥을 이어갈 만큼 수혈을 해주는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미·북관계가 풀리지 않더라도 북한은 상당기간 폐쇄상태 속에서, 물론 장기 전망은 뚜렷하지 않지만,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김정일 수령체제가 무너지더라도 외부 요인이 없다면 새로운 권력 구조가 등장하면서 통치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와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붕괴나 급변사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기상황이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입장은 대북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유보·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북한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얼 할 수 있겠어요? 미군이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를 위해 휴전선을 넘는다든 생각은 참으로 가당찮은 발상이어요. 미군의 군사적 개입은 즉각 중국군이 대규모로 강을 건너오도록 만듭니다. 또 북한군은 가만 있겠어요...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는 대규모 전쟁으로 치달아 상상하기조차 거북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와 달리 미·중 간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핵과 WMD 문제를 해결한다면 북한의 중국에의 예속 즉, 친중정권 수립을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지만, 이 경우 우리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탈락·배제되고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요 몇 년 사이 북한 붕괴론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된 측면도 있습니다. 붕괴를 전제한 '군사적 옵션'은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이해와 접근을 왜곡시키거든요. 북한체제의 존속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북한체제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은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버티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북한이 두더쥐처럼 마냥 웅크리고 있을 수만은 없고,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할 것입니다. 북한을 멀찍이 떼어 놓고 행동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민족 문제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해요. 북한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진욱: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에서도 유화적 제스처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의 미·북 양자회담 제안 역시 이런 한계상황을 극복하려는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기회가 오고 있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핵폐기와 같은 큰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김정일은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장기적 전망 속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 만: 북한 내부 상황으로서 '150일 전투'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150일 전투는 시장과 주민들의 동원과 통제를 위한 조치인데, '시장과의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최진욱: 150일 전투는 신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혁명적 대고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두 가지에 의존하게 되는데 하나는 동원이고, 다른 하나는 억압이죠. 과거에도 70일 전투, 100일 전투, 200일 전투 등과 같은 유사한 구호가 많았으나, 과거에는 동원이 중요한 기제였다면 지금은 동원은 큰 의미가 없고 억압 위주의 구호일 뿐입니다. 김일성 시대의 동원은 충성심을 유도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었으며, 이것을 이끄는 것은 당이었습니다. 그러나 150일 전투는 동원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로지 강압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억압과 충성유도가 동시에 병행했다면, 지금은 오로지 억압에만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경제도 인민경제, 당경제가 따로 있는데 인민의 생활은 저버리고 오로지 억압체제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당보다는 군이나 보위부와 같은 통제 기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요. 150일 전투는 동원의 기능이기보다는 통제 위주의 구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후계자 세습은 문명사회에 대한 조롱이자, 한민족 모두에 대한 모독

조 만: 후계자 문제가 국내외 언론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이 세습후계자 홍보 작업에 나섰다는 말이 전해지지만, 지금까지 후계구도 실체나 본격적인 작업은 뚜렷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후계자 수업을 시킨다면 어떤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세습후계자로 지목된 삼남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뚜렷이 알려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진욱: 북한에서의 후계자 문제는 과거의 틀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악화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제기되었고, 북한 체제가 당 위주의 체제에서 군부 주도 체제로 가면서 과거의 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인민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당적 절차를 밟기 보다는 수령이 후계자를 지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 과정이 너무 급격하면 안 되니까 후계자를 지명하고 나서 분위기를 띄우는 단계가 필요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른바 '김정운 대세론'을 만드는 단계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26살의 아무런 경력도 없는 김정운을 후계자로 공개하는 것은 북한이 아무리 독재체제라 해도 무리가 있기에 당분간 분위기 띄우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경력 조작 등을 통해서 후계자로 부각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적어도 1~2년은 필요합니다.

조 만: 세습후계자로 가는 기본적인 구도는 예상될 수 있는데, 선택한 후계자를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먼저 대외적



으로 분위기를 띄운 후, 외부 세계의 여론을 다시 역수입시켜 후계세습을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인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북한의 후계자세습 작업은 문명사회에 대한 조롱이고, 7천만 한민족 모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후계자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나친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이 희화화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후계자 문제가 필요이상으로 부각되어 핵문제나 대북정책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접근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우려됩니다.

최진욱: 후계자 세습에 대해서 언론 과잉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는 중대국면에 와있으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엄중한 사안인데 흥미위주로 다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북핵 문제를 돌아볼까요. 최근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관심이 큰데요...

새로운 접근법, ‘포괄적 패키지’

조 만: 지난 7월 중순 캄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안보리 결의 이후 관련 주요국과 일련의 협의 과정에서 ‘포괄적 패키지’를 언급했죠. 흔히 포괄적 패키지라고 하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담은 내용들을 보따리 채 한꺼번에 맞교환하자는 협상안이죠.

이번에 제안된 포괄적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즉, 북핵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에 대해 전체적인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완전한 핵 폐기의 종착역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상호 간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려는 접근법입니다. 종래의 단계적·부분적 접근과는 다릅니다. 그동안의 접근법은 ‘북한의 도발 → 미온적 제재 → 대화재개 및 새로운 보상’ 이라는 패턴을 반복하는 한계를 노정해 왔어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 같은 새로운 접근법은 사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했던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미국 측이 적극 수용한 데서 나온 안입니다. 포괄적 패키지는 이처럼 북한이 대화에 복귀한 국면을 상징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포괄적 패키지 안을 내놓았다고 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이 변할 것으로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요 근래에 들어 볼리비아 대사를 지냈던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까지 아주 강경한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미국의 대북 접근이 큰 틀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태도를 예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진욱: 포괄적 패키지는 하나의 방법으로 좋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괄적 패키지와 현 단계를 잇는 연결고리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개성 회담의 연장 회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국면, ‘5자 협의’ 등 보다 창의적 제안을 통해서 포괄적 패키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 북한이 스스로 고립상태를 자초한 셈인데, 이런 상황이 예상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 만: 올 초 미국 신정부 출범에 때맞추어 북한은 먼저 언술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로켓 발사(4.5)와 제2차 핵실험(5.25)을 감행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강력한 역풍을 맞아 결국 자충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엔결의안 1874호(6.13) 이후 중국도 가세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무척 당혹했을 겁니다. 여기에다 한미 정상회담(6.16)을 통



해 한미동맹의 혈맹관계가 재확인되었죠. 한미 간 틈새가 보이지 않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여간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대미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지요.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는 네오콘이 주도한 부시 행정부에 비해 좀 ‘말랑말랑할’ 것으로 기대했죠. 여기에서 같은 민주당 정부인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좋았던 추억’도 판단 오류에 한몫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공세적 드라이브에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유화적 대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죠. 그래서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일단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놓고 보자는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미국 조야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말았습니다.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미국 조야 일각에서 북한의 핵전략이 협상용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그런 인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북한이 실제로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모두에게 확인시켰던 겁니다. 여기서 미국이 화들짝 놀랐지요. 미국은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나름대로 대외전략의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다가, 민주당 정부로서도 북한의 핵보유 의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보유 의지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미국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셈입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내외적인 정치적 입장을 올바르게 간취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너무나 동떨어진 북한의 언행도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최진욱: 벌써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앞으로 미·북 관계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만: 저는 금년 말 즈음 아주 ‘절묘한’ 형태의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나 북한 걸음으로는 모두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면서 배짱을 부리는 것 같지만, 사실 둘 다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북한은 아직 신음소리를 내지 않지만 중국까지 가세한 제재국면이라 북한 통치층에겐 무척 힘듭니다. 지난 2005년 BDA 금융제재보다 훨씬 강한 제재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것 해결하지 않고는 테러리즘이나 중동 문제에 매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미국, 중국 3국의 입장이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봐요. 다만 어떤 방식의 타협인가가 문제지요.

북한: ‘침묵 모드’ 속의 북미 교섭 기대

북한은 7월 이후 ‘침묵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할테면 맘대로 해봐라”라는 식이거든요. 한편, 북한은 “현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다”(외무성 담화, 7.27)고 하여, 6자회담을 거부하고 양자회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미·북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쉽게 거두어들일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행태에 대한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 압박을 통한 협상 테이블 유도 전략

미국은 대북 경제·금융제재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갈 겁니다. 이는 ‘김정일 패밀리’에게 압박을 가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협상 시한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내년 5월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회의가 개최됩니다. 미국이 NPT 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1994년 10월 미·북 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다음해 1995년 NPT 연장회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NPT를 세계적 협약 규범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 간 핵감축 합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도 주목됩니다. 여기에 중동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 문제에서 손을 떼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전력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만, 아프가니스탄 전황이 미국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타결되어야 해요. 그래서 압박 수준을 점점 높여가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중국: 대국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한 창조적 역할 모색

중국으로서는 6자회담 복원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국제회의를 주도한 경우는 6자회담이 처음인데, 이 회담이 무위로 끝나면 대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중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북한에게는 압력과 회유를, 미국에게는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최진욱: 북한이 침묵모드에 돌입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단지 이것이 정교한 전략차원이 아니라, 당황한 상황에서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현재의 국제공조에 대해서 당황해서 모든 카드를 다 쓴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주도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비교적 국제공조체제가 잘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도권 행사 노력이 자칫 공조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북한 문제를 성과위주, 조급함으로 접근했다면,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서 상당히 초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의외로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 우리의 주도권이 필요하다는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자충수 덕을 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냉정히 보면 미국은 북핵 문제의 ‘봉합’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핵기술 및 핵물질 이전 방지가 당장 시급해요. 이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게 확신을 주어야 해결됩니다. 핵시설 폐기는 상징적 이벤트로 합의에 뒤따르는 후속조치에 불과합니다. NPT 체제 연장을 위해 북한의 NPT 체제 복귀도 의미가 큼니다.

주도권은 “디테일” 관리에 달려 있어

북한은 미국의 북핵 폐기 원칙에 부응하여 ‘한(조선)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강조할 겁니다. 이렇다면 미국과 북한 모두 한(조선)반도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게 되죠.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어요. 사실 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캄벨이 내놓은 포괄적 패키지는 ‘9·19 공동성명’의 합의내용의 새로운 버전으로



박요. 올 하반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연말 즈음, 어쩌면 내년 초가 될지도... 비핵화 원칙 위에서 절충적 형태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권은 원칙만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우리 정부가 “디테일”(in detail)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